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전년보다 17.2% 증가한 269억 달러(30조2천억원)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액 사상최대

작년, 17% 증가한 269억 弗

산업부, 2018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美·EU 투자증가… 4년연속 200억 弗 돌파
日 30% 감소, 中 238.9% 올라 '역대최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첫 60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신고기준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미국와 유럽연합(EU) 등 전통 투자국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기준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 달러(30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도착기준으로도 전년대비 20.9% 증가한 16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달성한 후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EU 89억2000만 달러, 미국 58억8000만 달러, 중국 27억4000만 달러, 일본 13억 달러 순이었다.

전통 투자국인 EU와 미국의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6.9%, 24.8% 증가한 반면 일본의 투자는 29.4% 감소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투자 감소 이유에 대해 ▲한국 수요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수요 감소 ▲전통적인 투자 분야인 화공, 전기전자 분야의 설비투자 주기(3~5년) 영향 ▲일본의 해외투자가 중국 및 아세안 국가로 집중되는 상황 ▲일본내 자체 설비투자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한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을 빚던 중국으로부터 투자는 238.9%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의료정밀, 운송용 기계 등 제조업 투자가 38.9% 증가한 100억5000만 달러였다. 국내 대기업과의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활발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대비 1.4% 증가한 155억8000만 달러로, 디지털 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라 IT 플랫폼·클라우드·전자상거래·핀테크 분야 등 다양한 신산업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공장 등을 짓는 그린필드형이 5년 연속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7.4% 상승한 200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합병(M&A)형은 합작투자 감소로 4.9% 감소한 68억9000만 달러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한국 경제의 굳건한 펀더멘탈과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작년 기업 4곳 중 1곳 '구조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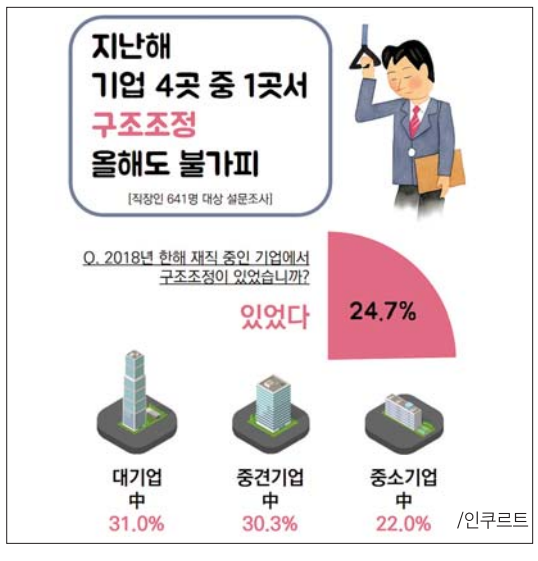
대기업 31%, 중견 30%, 중소기업 22% 順

지난해 기업 4곳 중 1곳 꼴로 구조조정을 시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크루트가 지난달 13~17일까지 5일간 직장인 회원 641명(인사담당자 64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올 한해 재직중인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직장인 4명 중 1명꼴인 24.7%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는 62.5%, '모르겠다'는 12.8%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구조조정을 시행한 비율은 ▲대기업(31.0%)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견기업(30.3%) ▲중소기업(22.0%)의 순서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9%포인트 높았고, ▲상장사(32.0%)가 ▲비상장사(22.5%) 대비 9.5%포인트 높았다. 구조조정 시점은 '상시'(34.3%)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구조조정 사유 발생 시'(32.0%)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12.4%)보다는 ▲'하반기'(18.9%)에 많았고, ▲'매월'(1.2%) 실시한다는 소수지만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구조조정이 시행된 배경(중복선택)으로는 '인력감축, 감원 등을 통한 조직재정비 차원'(20.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영진의 재량으로 알 수 없음(13.2%)', ▲'목표실적 미달성에 대한 책임 부과'(11.5%), ▲'매각 등 조직 규모가 작아진 탓에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7.7%), ▲'신규채용 진행을 명목으로 한 실제적인 감원'(6.4%), ▲'근태, 기강해이 등의 이유로 퇴사종용'(6.0%), ▲'상시적인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서 진행'(4.3%), ▲'합병 등 조직 규모가 커진 탓에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2.1%) 등의 순이었다.



/인쿠르트

/한용수 기자 hys@

쉬워진 형사판결문 검색 '횡령' 등 임의어 치면 열람

대법원, 통합검색·열람 서비스

피고인 실명화·AI도입 등 과제 산적

형사 판결문 검색이 쉬워졌지만, 피고인 실명화와 인공지능 도입 등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형사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법원 누리집에서 전국 법원의 형사 판결서를 '횡령' 등 임의어로 검색할 수 있다. 수수료는 민사와 같이 건당 1000원이다.

이전까지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열람이 가능해, 형사재판 당사자가 관련 사건을 미리 분석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무전유죄와 소송 남발 방지 등 사법정의에 필요하다며 판결서 열람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학계에선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짧은 검색 기간과 비실명 판결문에 붙는 수수료 문제 때문이다. 형사 판결문은 2013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만 검색할 수 있다. 이전 판결문은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해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밟아야 볼 수 있다.

수수료 지불 역시 문제로 거론된다. 해당 판결문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일에도 1000원을 내야 하는 구조여서, 법원이 유효 문건 1개를 건지는 데 100건 이상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익명 처리된 판결서 열람에 수수료를 내는 일이 과연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환영 논평에서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 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에 맞지 않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판결서 검색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서 열람을 계기로 사법부와 행정부가 판결문 분석에 필요한 도구를 일반에 공개해, 4차산업혁명 법률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나라에서 판결문 학습 데이터셋(Dataset·여러 정보를 활용 목적에 맞게 묶은 데이터 일체)을 일반에 제공하면, 법률시장에서 인공지능 판사·변호사 프로그램 개발 경쟁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나라에선 판결문 분석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지 말고, 앱 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만 공개하면 된다"며 "우선 형태소(말의 최소단위)부터 분석하기 위한 라벨링(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 붙이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이 라벨링되면, 기계학습으로 관련 데이터가 쌓인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판사 혹은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강 교수는 "이런 도구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이 선점하게 내버려 둘 경우 공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에서 알고리즘(인공지능 프로그램 작동 원리)을 만들어 무료 소프트웨어 도구 저장소인 '깃허브(Github)'에 등록하면, 시장에서 이를 활용한 판결문 분석 프로그램 경쟁이 촉발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알고리즘 개발을 외주로 해결하려 들면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미국 MIT(메사추세츠 공대) 미디어랩에 기술자와 철학자·사회학자·정치학자·윤리학자·공학자가 붙듯이, 판결문 알고리즘 역시 판사와 기술자들이 대등하게 대화하며 개발해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의 판결문 작성 단계부터 라벨링 처리가 되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범종 기자 joker@

원칙 없는 초급간부 운용… 나는 떠나련다

문형철
국방기자 칼럼

장교와 부사관을 아우르는 초급간부를 '창끝 전투원'이라고 칭한다. 전후방 일선에서 병(兵)들과 몸을 부대끼며 지휘하기에, 군 당국은 이들이 초급간부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최근 군 간부를 꿈꾸는 10대들이 이용하는 포털 등에는 초급간부들의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접한 초급 간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금처럼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 육군의 백두산체계와 같은 원대한 전력증강 계획은 사상누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출산률의 급감으로 군의 우수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군 당국은 미래를 위해서 원칙을 어느 때보다 지켜야 할 상황이다.

한 현역 부사관은 "1주일 간의 5분 전투대기 임무가 끝나는 날은 오후1시에 퇴근하는 부대규정이 있어도 제 때 퇴근해 본 적 없다. 심지어 당직근무자가 부족하면 5분대기 지휘자가 당직근무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군에 원칙이 있냐며 반문했다.

그는 "육군의 핵심전력인 장비를 운영하는 초급간부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관리를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다"면서도 "주어진 교육 기회는 하나 같이 엉성하고 상훈상신의 기회도 '격이 안맞다'는 이유로 퇴짜맞기 일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사관은 "부사관이 되고 싶어, 부사관학과를 거친 많은 동기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군 당국이 현실에 눈뜨길 당부했다.

부사관학과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부사관으로 선발하기 위해 설치된 특수학과다. 하지만 일반 전문학사에 비해 자격취득과 전공의 깊이가 얕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게 관련학과 교수들의 전언이다.

한 관련 학과 교수는 "특전사 경우 인근 학교와 협약을 통해 산업체위탁 방식의 전문학사와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훈련이 잦은 부대 특성을 고려해 분교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부대 출신의 일부 분교장들은 후배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규정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영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단 특전사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 부대에서 부사관 및 위관장교를 대상으로 개설된 '인성교관 과정'도 파행을 걷고 있다고 한다.

검증되지 않은 교육기관과 준비되지 않은 강사들이 자신들이 속한 기관장과 강사 본인의 홍보만 집중하고, 출석관리 등 교육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다수의 초급간부들의 불만이다. 군 당국은 초급 간부의 원칙적 운용과 예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captinm@